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 분석

2020. 12

손태홍·최수영

■ 논의의 배경과 목적	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주요 내용	6
■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 내용	1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22
■ 결론	28

-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이 시작되었는데 9월 26일까지 10만명 이상이 청원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며, 소관 위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법안 제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착수해야 함.
- 대형 산업재해 또는 중대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의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기업 범죄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경영책임자는 사망사고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매출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벌금, 영업 취소 등의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참고 사례로 활용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발의된 국내 법안과 달리 단체의 과실 유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를 동일시하지 않는 등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

 - 「기업과실치사법」 도입 이후 영국의 건설업 사고사망십만인율은 2008년 2.04에서 2017년에는 1.60으로 연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2.6% 감소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사고사망십만인율과 같은 산업재해를 측정하는 지표는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 안전의식 제고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영국에서는 「기업과실치사법」의 도입과는 별개로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제도 등의 운용을 통해 산업재해를 낮추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때문에 「기업과실치사법」의 도입에 따른 재해 감소 효과는 명확하지 않음.
-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평가될 수 있음. 하지만 산업별 특성과 환경이 다르고 이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이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의 제정과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임.

 - 건설산업은 최근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 등의 조치에 따라 법적 처벌과 경제적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망사고 방지 의무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추가적인 제도나 법률의 운용도 필요하지만,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기업 투자와 현장 인력의 안전수칙 준수 등도 동반되어야 안전한 건설산업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음.

I 논의의 배경과 목적

1. 논의의 배경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건설산업을 포함해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산업 주체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해 오고 있음.
 - 산업의 구분과 무관하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은 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다수의 인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06명의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산업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85명과 428명을 기록해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연간 400명 이상의 사고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산업임.
-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했음.
 - 최근에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이 시작되었으며, 9월 22일 기준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업계와 안전사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간의 시각 차이는 뚜렷함. 업계에서는 사망사고 등을 포함해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의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 강화에만 집중된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도 있음.
 - 반면에 열악한 근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업체의 조치가 미흡하고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 즉, 중대재해는 근로자의 작업 중 실수가 아니라 근로 환경의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 범죄라는 인식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유사한 해외 사례 법률로 인용되고 있음. 2007년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은 대형 산업재해 또는 중대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의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임.

-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이 중대재해 감소라는 실질적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 아래 기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산업의 구분과는 무관하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주가 해당됨. 결국, 국내의 모든 건설기업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임.

2. 논의의 목적

- 건설산업은 분절된 생산구조에 따른 다수의 계약이 요구되고, 기후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옥외 산업이며, 높은 인력 의존도 등의 태생적 특성을 가짐. 이러한 산업적 특성은 타 산업과 비교해 안전사고 발생 빈도를 높이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위험 산업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조치들이 추진되었음에도 여전히 작업 도중 또는 시설물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처벌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 등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발의된 법안의 보호 대상, 의무 주체, 처벌 규정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해외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두 법률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한 차이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상술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건설산업 안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주요 내용

1. 보호 대상

- 이 법의 보호 대상은 제1조(목적)에 따라 시민, 노동자, 공중이며, 이는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음.
 - 제1조(목적)에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제2조(정의) 제6호는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비롯해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관계 수급인까지 포함해 규정하고 있음. 사업주를 비롯하여 동법의 의무 주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대상보다 광범위함.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일부 포함되었으나, 사업주의 대부분 안전보건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임.

〈표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2조 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2. 의무 주체

- 주요 의무 주체는 사업장과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기관, 경영책임자이지만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도 의무 주체에 포함됨.
 -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 생략 … 사업주, 법인, 기관, 경영책임자 및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로 명시되어 있음.

-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기관, 경영책임자와 건설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권한을 보유한 공무원이 의무 주체에 해당됨.
- 이 법의 주요 의무 주체 및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이라 함은 제2조(정의) 제7호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어 의무 주체의 범위가 넓음.

〈표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2조 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주가 법인이거나 기관인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유해·위험 방지 의무

- 의무 주체는 제3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유해·위험 방지 의무에 관한 내용은 없음.
 -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 제1항에는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 생략 …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동 법률은 유해·위험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의무는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¹⁾
- 또한, 제4조에서는 도급 관계의 경우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과 공동으로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해, 도급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제4조(도급과 위탁 관계에서 유해·위험 방지 의무) 제1항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여러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한다), 위탁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1) 법제사법위원회(2020.7),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법안검토 보고서 p.14.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서도 도급인의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고 있어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차이를 보임.
-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도급인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됨.²⁾

4. 처벌

(1) 개인에 대한 처벌

■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서는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제3조와 제4조 위반으로 ① 보호 대상이 사망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② 보호 대상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안에서 명시하는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성격이 아닌 과실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 사망시 벌칙의 경우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하한형이 명시되어 있음.
- 개인에 대한 처벌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규정한 수준보다 최대 2배까지 높아졌음에도 처벌 수준을 강화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음.

〈표 3〉 20대와 21대 국회 발의안의 개인에 대한 처벌 비교

구분	노회찬 안(20대 국회)	강은미 안(21대 국회)
보호 대상 사망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보호 대상 상해시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이 법안 제5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수준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처벌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보보다도 높으며,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에 대한 처벌과 유사한 수준임.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법제사법위원회(2020.7),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법안검토 보고서 pp.14-15.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1항에는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사망사고를 고의로 계획할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만을 고려할 때, 이 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 위반을 과실이 아닌 고의로 해석하고 있음.

- 만약, 경영책임자 등이 개인적 혹은 기업에 악의를 품고 고의로 해당 기업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계획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 가능할 것임.

❖ 또한, 법안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2명 이상 사상이 발생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다중의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준도 매우 높음.

-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제3항에서는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이 법에 적용해보면, 예를 들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협력업체의 경영책임자 등은 최소 6년, 그리고 제4조에 따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종합 건설업체의 경영책임자 등은 최소 1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다중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5조 제3항에 의거한 합산에 의한 가중 처벌은 벌칙 수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서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상자 수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3년 이상 징역)을 합산하는 경합법 가중방식은 다수의 행위로 다수의 보호 대상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다중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산업재해 사고는 1회의 행위로 발생되기에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가 아닌 「형법」 제40조에 의한 상상적 경합(중한 죄로만 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임.

(2) 법인에 대한 처벌

❖ 법인과 기관에 대한 처벌은 법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의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양벌규정의 성격임. 법인과 기관에 대한 처벌은 ①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 ②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가중 벌금, ③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제재 병과로 구성됨.

- ❖ 제6조 제1항에 따른 법인과 기관에 대한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규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처벌인 벌금 규정(10억원 이하)과 비교해보면 하한형이 새롭게 도입되고 상한형이 2배로 높아졌음.

-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 기존 최대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음. 개정 이후 처벌 강화에 따른 재해 감소 여부에 대한 검증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2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음.

〈표 4〉 「산업안전보건법」 및 20대, 21대 발의안의 기업에 대한 처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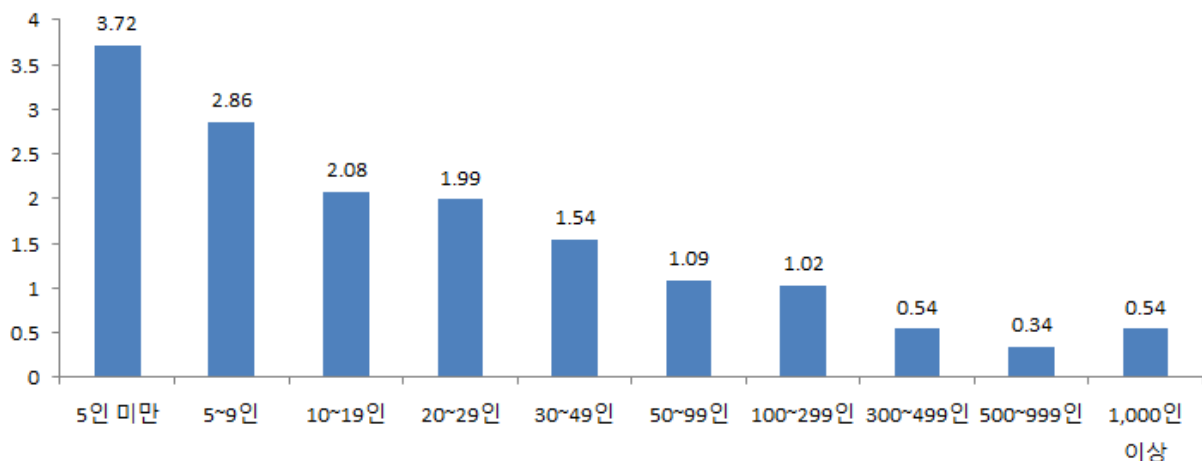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	노회찬 안(20대 국회)	강은미 안(21대 국회)
하한형	-	-	-	1억원
상한형	1억원	10억원	10억원	20억원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 다음으로, 제6조 제2항에서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한 경우 수입액 또는 매출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림 1〉 2018년 건설업 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건설업 평균 : 1.65)

(단위 : 만인율)



자료 : 2018 산업재해 현황 분석, 고용노동부.

-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벌금의 상한선을 높게 규정하는 것은 대기업에 불리한 조항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남.

■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및 법인에 대한 벌금과 더불어 제6조 제3항에서는 법인 및 기관에 대한 허가 취소 및 3년간 종사 금지, 1년 이상 공공계약 배제 등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음.

〈표 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6조 제3항

제6조(법인 등의 처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의 허가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 금지

(3) 공무원에 대한 처벌

■ 제7조에서는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해당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7조

제7조(공무원의 처벌)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관련된 감독·인허가

5. 손해배상

■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는 3배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규정 위반으로 손해 발생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에서는 차별적 처우로 인한 기간제·단기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명령이 가능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 책임)는 정보 주체에게 손해 발생시, 법원은 손해액의 3배 범위 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표 7〉 타 법 및 20대, 21대 발의안의 손해배상 책임 비교

구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간제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노회찬 안 (20대 국회) 제10조	강은미 안 (21대 국회) 제11조
하한	-	-	-	-	3배
상한	3배	3배	3배	10배	10배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상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은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에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함.

6. 양형 절차와 처벌사실 등의 공표

■ (양형 절차) 이 법안 제8조에서는 유죄 판결 후 별도의 형의 선고를 위한 기일을 설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 회부 또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처벌사실 등의 공표) 이 법의 제10조에서는 처벌 및 조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망재해 발생 등의 기업에 대한 공표 규정을 두고 있음.
 - 제10조에서는 구체적인 처벌사실 등의 공표에 대한 내용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개인에 대한 처벌 정보가 공표될 경우 처벌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음.

III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 영국은 1944년부터 동일성 원칙(identification principle)에 따라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음. 하지만 기업 고위 경영진의 지휘 의사(directing mind)를 증명하기 어려워 처벌 사례가 매우 드물었음.
 - 동일성 원칙은 독립적 판단과 재량권을 보유한 기업의 고위 경영진의 귀책사유는 자동적으로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경영진의 범죄 행위가 존재한다면 법인의 범죄 행위도 인정되므로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진다는 원칙임.
- 1987년 제브뤼헤(Zeebrugge) 사이를 오가는 Hearld of Free Enterprise 유람선 침몰(193명 사망) 사고 등 1980년대 영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성 원칙에 따른 기업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음.
 - 동일성 원칙에 따라 기업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중과실로 인한 과실치사의 죄책이 인정되어야 하고, 경영진의 기업에 대한 지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영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1990년대부터 동일성 원칙에 따른 기업 처벌의 난점을 극복하고, 법인에 대하여 과실치사 등의 형사 죄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 이후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이하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됨.
 - 동 법률로 인하여 대형 산업재해 및 중대 사망사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
-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사망 결과에 대한 경영진이나 실무자 개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아니라, 조직체 관리와 조직 방법의 적절성 여부가 범죄 성립의 주요 요건임. 이에 따라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책임이 조직체의 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제18조).
 - 조직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형법」상의 과실치사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2. 의무 주체와 범죄 성립 조건

(1) 의무 주체

-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되는 단체의 범위는 기업 외에도 정부 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법 집행기관, 고용주인 동업회사(파트너십), 노동조합 또는 고용주 협회 등으로 해당 법에서 인정하는 의무 주체는 다양함.
- 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도급인의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함.
 - 사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운영을 분산시키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에 대한 규명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영국 국립기소청은 수급인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도급인에게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동법상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³⁾
- 하지만 영국에서는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 국내에서 발의된 안과 같이 반드시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과 공동으로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2) 범죄 성립 조건

- 기업의 과실치사죄 적용을 위해서는 사람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의 원인이 해당 단체가 사망한 자에 부담하는 관련 주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되어야 함.
 - 주의 의무 위반은 일정한 상황에서 그 단체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됨.
- 또한, 고위 경영진의 단체 활동 관리 및 구성 방식이 상술한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의 본질적인 요소인 상황에 해당해야만 함.
 - 고위 경영진은 단체 활동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조직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에 실질적인 관리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3) http://www.cps.gov.uk/legal/a_to_c/corporate_manslaughter/.

- 기업 과실치사죄 인정의 주요 판단 요소는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직의 실무자 등 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님. 기업 조직의 관리 및 운영 체계의 적절성 여부가 범죄 성립을 위한 판단의 중점임.

3. 주의 의무의 의미와 유형

- 주의 의무란 제2조 1항에서 예시된 항목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실법제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다음의 의무를 의미함.⁴⁾
 - 단체의 피고용인 또는 단체를 위해 일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개인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 시설의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의무
 - 단체에 의한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건설 또는 보수 작업 수행, 기타 상업적 활동 수행, 공장 및 차량 또는 기타 물건 사용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
 -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개인과 단체가 그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 「기업과실치사법」은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 주의 의무 개념 적용을 통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상업적 활동 등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것은 법의 적용 대상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4. 벌칙

- 「기업과실치사법」은 법인에 대한 벌칙만이 있을 뿐, 기업 경영진 등 개인에 대한 벌칙은 없음. 법인에 부여되는 벌칙은 벌금, 구제명령, 공표명령으로 구분됨.
 - 구제명령은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지침 등에 대한 법원의 자구 수정 지시이며, 공표명령은 기업이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유죄 판결에 따른 각종 제재의 내용 등을 국민에게 공표하는 법원의 명령임.
- 벌금의 경우 법적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제한적 벌금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Sentencing Council)에서 범위 및 한계 등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음.

4)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국회도서관, 2012」 번역본을 인용함.

❖ 원칙적으로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4개의 범주로, 그리고 중대재해에 따른 손해 발생의 정도와 책임성 등을 근거로 두 개 범주로 구분해 벌금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아래의 <표 8>에서 보듯이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된 벌금 범위를 적용하고 있음. 벌금액의 범위는 같은 매출액 규모라 하더라도 손해 정도와 책임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하지만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벌금 양형 기준에서 정하는 벌금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벌금 부과도 가능함.
- 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매출액 5,000만 파운드 이상), 중기업(1,000만~5,000만 파운드), 소기업(200만~1,000만 파운드), 영세기업(200만 파운드 이하)으로 구분함.
- 또한, 손해(Harm)의 정도 및 책임성(Capability)에 따라 범주 A와 B를 구분하여 기업 규모와 과실에 따라 차등화된 벌금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음. 범주 A는 과실 수준이 높은 경우, 범주 B는 과실 수준이 낮은 경우를 의미함.
- 「기업과실치사법」 양형 기준은 2010년 마련되었으며, 2014년 개정됨. 아래의 양형 기준은 2014년 기준임.

〈표 8〉 영국 양형위원회의 「기업과실치사법」 양형 기준 가이드

(단위 : 파운드)

구 분	매출액	범주	시작 금액	벌금 범위
대기업 (Large)	5,000만 이상	A	7,500,000	4,800,000~20,000,000
		B	5,000,000	3,000,000~12,500,000
중기업 (Medium)	1,000만~5,000만	A	3,000,000	1,800,000~7,500,000
		B	2,000,000	1,200,000~5,000,000
소기업 (Small)	200만~1,000만	A	800,000	540,000~2,800,000
		B	540,000	350,000~2,000,000
영세기업 (Micro)	200만 이하	A	450,000	270,000~800,000
		B	300,000	180,000~540,000

자료 : U.K. Sentencing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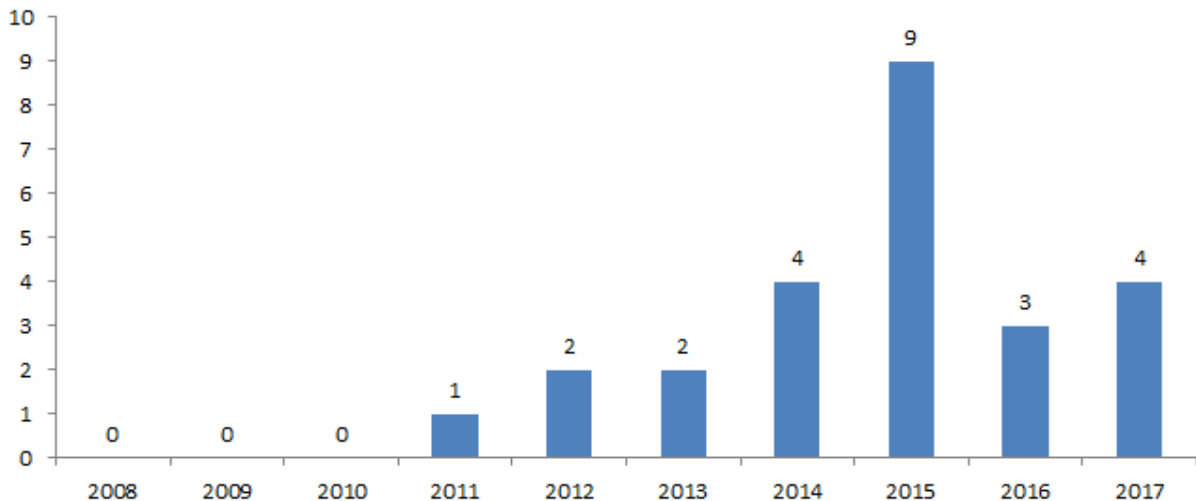
5. 「기업과실치사법」 처벌 사례

❖ 2008년 「기업과실치사법」 시행으로 2011년에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가 처벌된 이후로 2017년까지 총 25건이 유죄 판결이 내려짐.⁵⁾

5) Victoria Roper(2018),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A 10-Year Review,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연도별로는 2015년에 9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져 가장 많았으며, 시행 후 첫 3년간은 처벌된 사례가 없었음.

〈그림 2〉 「기업과실치사법」에 따른 처벌 건수(2008~2017)



자료 : Victoria Roper(2018),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A 10-Year Review.

- 25건의 유죄 판결 사례 중 최초 18건은 양형위원회의 최초 가이드라인에 의해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그 후 7건은 개정된 가이드라인(〈표 8〉 참조)에 따라 처벌되었음.

- 영국에서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되어 기업이 처벌을 받은 최초의 사례는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사건이며, 이외에도 JMW Farms 사건, Lion Steel Equipment 사건 등이 있음.

- 2010년 발생한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사건은 해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해자 붕괴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배심원단은 이 기업의 안전보건 시스템이 안전보건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음. 해당 기업은 총 38만 5,000파운드의 벌금형 처벌을 받음.⁶⁾
- 두 번째 사례(2012년 판결)는 JMW Farms의 직원이 지게차의 지게 위에서 떨어진 금속 쓰레기통에 맞아 사망하여 18만 7,500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은 사건임.
- 세 번째 사례(2012년 판결)는 중견 회사인 Lion Steel Equipment Ltd.의 직원이 지붕 위의 누수 원인을 확인하려다 지붕 채광창 속으로 추락해 사망하여 48만 파운드의 벌금을 받은 사건임.

6) CQMS Limited, Corporate Manslaughter Prosecutions.

〈표 9〉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한 주요 처벌 사례

판결	처벌 기업	사고 주요 내용	벌금(파운드)
2011.02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2010년, 1명 사망	385,000
2012.05	JMW Farms	2010년, 1명 사망	187,500
2012.07	Lion Steel Limited	2008년, 1명 사망	480,000
2013.11	Princes Sporting Club Ltd	2010년, 1명 사망	134,579.69
2014.03	Mobile Sweepers (Reading) Ltd	2012년, 1명 사망	8,000
2015.07	Huntley Mount Engineering	1명 사망	150,000
2015.07	CAV Aerospace Ltd	1명 사망	600,000
2015.12	Baldwins Crane Hire Limited	2011년, 1명 사망	700,000
2016.01	Linley Developments	2013년, 1명 사망	200,000
2016.02	Sherwood Rise Limited	2012년, 1명 사망	30,000

자료 : CQMS Limited, Corporate Manslaughter Prosec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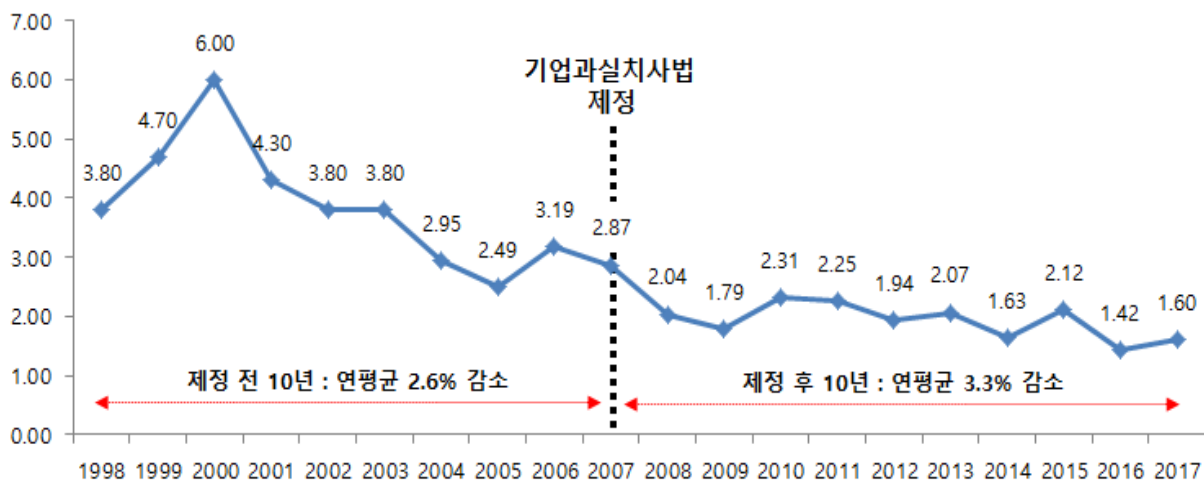
6. 영국의 사고사망 재해 감소 추이

- 영국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s, 이하 HSE)에 따르면 영국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십만인율⁷⁾은 1998년 3.80에서 2017년 1.60으로 20년간 약 50% 감소하였음.
 - 동 기간 사고사망십만인율은 2000년 6.00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6년 1.42로 가장 낮았음.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된 2007년 건설업 사고사망십만인율은 2.87임.
- 사고사망십만인율과 같은 사회의 산업재해를 측정하는 지표는 기술의 발달, 생활 수준 향상 및 안전에 관한 의식 수준 향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즉 개선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커다란 산업재해 지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기업과실치사법」과 같은 특정 제도의 신설로 인해 산업안전 관련 지표가 향상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
 -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한 사고사망십만인율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법 외에 다른 변수(예컨대, 영국 산업안전과 관련한 다른 제도의 변화)가 없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함.

7) 사고사망십만인율은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함. 국내의 경우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이 활용되고 있음.

- 하지만 영국에서는 건설 안전관리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CDM 제도[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가 2007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정되는 등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한 재해감소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림 3〉 영국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십만인을 변화 추이(1998~2017)



자료 : 영국 안전보건청.

-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후 10년간 영국 건설산업의 연평균 사고사망십만인을 감소율은 각각 2.6%, 3.3%로,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전후 사고사망십만인을 감소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제정 전 10년(1998~2007년) : 10년 평균 사고사망십만인율은 3.79(2000년 6.00으로 최대, 2005년 2.49로 최소)이며, 연평균 증감률은 -2.6%(최대 : 2000년 28.1% 증가, 최소 : 2001년 28.3% 감소)임.
- 제정 후 10년(2008~2017년) : 10년 평균 사고사망십만인율은 1.92(2010년 2.31로 최대, 2016년 1.42로 최소)이며, 연평균 증감률은 -3.3%(최대 : 2015년 30.1% 증가, 최소 : 2016년 33.0% 감소)임.

- 영국 로섬브리아대학(University of Northumbria)의 Victoria Roper⁸⁾ 로스쿨 교수는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10년 효과 분석” 논문에서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한 영국의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8) Victoria Roper(2018),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A 10-Year Review,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Victoria Roper 교수는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후 2008년 영국의 사고사망십만인율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함.

■ 영국 안전보건청의 니콜라스 릭비 수석감독관⁹⁾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낮은 사고사망십만인율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전후로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트렌드”라고 설명함.

- 니콜라스 릭비 수석감독관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과실치사법」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에 상징적 의미를 준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다”며, “영국의 사고사망십만인율이 한국의 20분의 1에 불과한 것은 (「기업과실치사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산업안전에 관해 기업에 자율성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이어온 영향이 크다”고 설명함.

■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후 영국의 사고사망십만인율이 2년 동안 획기적으로 감소했음을 근거로 국내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2009년 이후 사고사망십만인율이 다시 증가한 사실 등을 간과하고 있음.

- 영국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십만인율은 2007년 0.79에서 2009년에는 0.50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하지만 2010년에 다시 0.60으로 높아지는 등 최근 들어서는 0.42(2016년 기준)에서 0.60(2010년)의 비율을 보임.
- 건설산업 사고사망십만인율도 마찬가지임. 2007년 2.87에서 2009년 1.79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2.31로 증가하는 등 2017년까지 2009년보다 낮은 사고사망십만인율을 보인 해는 2014년(1.63), 2016년(1.42), 2017년(1.60)밖에 없음. 따라서 특이하게 낮았던 2009년 사고사망십만인율만을 근거로 「기업과실치사법」의 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그림 2>에서 보듯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된 후 2010년까지 이 법으로 처벌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음을 감안하면 2009년의 낮은 사고사망십만인율이 「기업과실치사법」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힘든 측면이 있음.

9) 시사저널(2020.6.27), [영국 현지 취재] “기업과실치사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줄일 수 있다?”... 팩트 체크 5문5답.

IV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1. 주요 비교 항목

- 이번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등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고 있음. 특히, 대형 산업재해와 중대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진의 처벌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기업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주요 해외 사례로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기업과실치사법」을 주요 핵심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함.

〈표 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주요 항목 비교

항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배경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 확보와 중대재해 사고의 방지	대형 산업 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
보호 대상		시민과 노동자	명시되지 않음.
의무 주체	개인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무원	無
	단체	법인 또는 기관	기업, 정부·자치단체, 경찰, 동업회사, 노동조합, 고용주 협회
범죄 성립 조건	재해 종류	사망 및 상해	사망
	중과실 유무	과실	중과실
일반적 의무		유해·위험 방지 의무	주의 의무
도급관계 의무		도급인 의무 = 수급인 의무	도급인 의무 ≠ 수급인 의무
처벌	개인	징역, 벌금, 공표	無
	법인	벌금, 행정제재, 공표	벌금, 구제명령, 공표명령
손해배상		손해액의 3~10배	無

자료 :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정리함.

(1) 제정 목적과 의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목적은 유해·위험 방지 의무 소홀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리고 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 책임과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있음.
 - 동 법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음.
- 영국은 지난 1944년부터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처벌 사례도 드물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음.
 - 기업의 경영책임자 처벌과는 관계없이 기업에 대한 과실치사 등의 형사 죄책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됨.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 운영 또는 관리 방식의 문제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기존 제도보다 효과적으로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2) 보호 대상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1조에서는 사업주, 법인, 기관, 경영책임자 및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법의 집행을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즉, 인명사고의 주체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일반 시민인지 구분하지 않고 사망사고를 유발한 원인 제공 단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함.

(3) 의무 주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서는 주요 의무 주체로서 법인, 기관과 같은 단체 외에도 사업주, 경영책임자,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보유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물건의 수거 및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와 이에 준하는 자를 의미함.
- 경영책임자는 사업주가 법인이거나 기관인 경우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아니지만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함.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도 법인을 포함해 정부 조직, 법 집행기관, 노동조합, 사용자 협회까지 과실치사 및 살인죄의 의무 주체로 규정할 수 있지만, 조직체의 구성원은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정부 조직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업과실치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이 완전 면책 또는 상황에 따른 부분 면책과 같은 기소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4) 주요 의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각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와 도급과 위탁 관계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 및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유해·위험 방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제2조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지켜야 할 주의 의무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음.

- 4가지 주의 의무 유형 : ① 종업원이나 종사자 등에 대한 주의 의무
② 시설 및 부지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
③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상업적 활동, 차량의 이용 등에 대한 주의 의무
④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체포 및 구금된 사람에 대한 주의 의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5조에 따르면 도급 관계에 있어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해야 함. 하지만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도급인의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함.

- 즉,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를 동일시하고, 영국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를 구분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5) 처벌 규정

- (개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규정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2명 이상의 인명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대상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제18조에서는 개인은 기업 과실치사 범죄의 방조, 교사, 조연 또는 알선의 죄가 있을 수 없고 가담의 죄가 있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법인 등에 대해 최대 전년도 매출액의 10분의 1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주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크게 벌금, 구제명령, 공표명령을 활용하고 있음.
 - (국내) 법인 등의 처벌로는 위반행위에 따라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해당 법인의 전년도 매출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을 과징할 수 있음. 벌금형 외에도 영업취소, 영업정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 배제,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공모 금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받을 수 있음.
 - (영국) 법인에 대한 벌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한 없이 부과할 수 있으나 양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또한, 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발의된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보호 대상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개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고 있지만,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법인에 대한 처벌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6) 손해배상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징역, 벌금, 행정처분 등의 처벌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손해배상액의 결정시에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11조 제2항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시사점

- 중대재해로 인한 다수의 인명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책임자의 처벌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른 처벌의 수준도 위법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공의 인식이 팽배함.
 - 세월호 참사,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은 법인 등 단체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대형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임.
- 하지만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개인 처벌 강화와 법인 등 기업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이 합리적인 의심과 근거 없이 처벌의 수준만 대폭 상향된 점은 법률 제정을 통한 중대재해 방지가 단순히 처벌 강화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기업에 대한 과중한 처벌은 사망사고의 책임이 없는 기업의 다수 구성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 특히, 매출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손실은 추가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피고용인에게까지 처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음.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강은미 의원의 발의안과 다르게 기업에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경영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조직체의 관리 및 운영 방식의 결함이 중대재해를 야기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경우에 엄격히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하여 기업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음.
- 즉,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은 범죄 기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노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임.

V 결론

-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한 사회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높음.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는 곧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인으로,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무가 있음.
 - 동시에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 안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각종 산업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사망 사고를 유발하는 중대재해는 반드시 예방되어야 할 사안이며, 재해의 예방은 국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됨.
-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도 사망사고 등을 포함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차원의 노력 중 하나로 평가됨. 해당 법안은 재해로 인한 인명사고의 책임을 ‘강력한 처벌’이라는 시각에서 해석함으로써 기업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참고 사례로 활용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지난 2007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임. 두 법의 제정 배경은 대형 산업 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의무 주체, 중과실 유무, 도급 관계 의무, 손해배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의 하한형을 도입함. 인명사고 발생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며, 도급인의 의무와 수급인의 의무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써 계약관계에 따라 처벌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실제로 입법화되면,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한 개의 기업이 다수의 현장을 운영할 수 있고 단위 사업도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정부의 “건설현장 화재 안전대책”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 상향과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그리고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추진 등이 포함됨.
 - 이러한 대책만으로도 건설기업이 부담해야 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망사고 방지 의무의 수준은 대단히 높아짐.
- 옥외 현장과 인력 중심의 생산방식을 갖고 있는 건설산업은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때문에, 기업은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법률 등 제도 운용에 힘써야 함.
-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전을 건설산업의 최고 가치로 인식시켜 기업이 지켜나가야 할 첫 번째 책무로 정립하는 것이 안전한 건설산업을 만드는 근간이 될 것임.

손태홍(연구위원·thsohn@cerik.re.kr)

최수영(연구위원·sooyoung.choe@cerik.re.kr)